

‘유전결혼 무전비혼’

〈有錢〉

〈無錢〉

광주·전남 신혼부부 역대 빛지고 출발 ... 초혼부부 5만 쌍 첫 봉기
돈 없어 결혼 미루고 결혼해도 절반 이상이 맞벌이 ... 출산도 미뤄

불황과 코로나의 짝은 그림자로 인해 ‘돈과 경제력’이 결혼과 출산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이 없어 결혼을 미루거나 안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으며, 결혼을 했다더라도 맞벌이의 경우 일을 하느라 아이 낳기를 미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신혼부부 대다수는 역대 빛을 지지 않고는 새출발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광주·전남에서 신접살림을 차리는 데 지는 빛이 ‘역대’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해 지역 초혼 부부 5만쌍이 처음 무너졌다. 팍팍한 살림에 결혼 5년 이내 맞벌이 초혼 부부의 5쌍 중 2쌍(40%)은 자녀가 없었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N포’에서 비롯된 인구 절벽·지방 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주거 개선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2일 통계청 ‘신혼부부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혼인 신고를 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는 광주 2만9596쌍·전남 3만3351쌍 등 6만2947쌍으로, 1년 전보다 4589쌍(-6.8%) 감소했다. 이는 2015년 통계 작성(8만6179쌍) 이래 가장 작은 규모다.

광주·전남 신혼부부의 75.5%는 초혼이었는데, 지난해 초혼 부부는 처음 5만쌍 선 밑으로 떨어졌다. 초혼 신혼부부는 광주 2만3923쌍·전남 2만3618쌍 등 4만7541쌍으로, 전년(5만1090쌍)보다 3549쌍(-6.9%) 줄었다.

광주·전남에서 신혼부부가 해마다 수천 쌍씩 줄어드는 건 장기 불황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역대’ 빛을 지지 않고는 결혼을 할 수 없는 현실과 연관 있다.

지난해 지역 10쌍 중 9쌍(광주 88.8%·전남 86.3%)은 빛을 지고 신혼을 시작했다.

금융권 대출잔액을 보유한 신혼부부 비율은 5년 전인 2016년 광주 81.8%·전남 81.4%였지만, 해마다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대출잔액을 보유한 신혼부부를 금액대별로 나눠보면 광주 62.5%·전남 54.9%는 1억원 이상 빛을 지고 있었다.

특히 2억원 이상 구간 비중은 광주 31.8%·전남 25.1%로, 1년 전(광주 25.0%·전남 20.0%)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10쌍 중 1쌍(광주 13.9%·전남 11.9%)로는 3억원 이상 대출금을 지고 있었다.

광주·전남 신혼부부들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1년 새 1000만원을 훌쩍 넘게 늘어났다.

지난해 지역 신혼부부들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광주 1억3505만원·전남 1억1346만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136만원(9.2%↑)·1878만원(19.8%↑) 급증했다.

중앙값은 대출잔액이 있는 부부를 잔액값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값으로, 통계 자료에서 대푯값의 하나로 꼽힌다.

지역 신혼부부들의 대출 중앙값은 5년 전인 2016년(광주 6400만원·전남 5098만원)의 2배 수준으로 뛰었다.

지역 집값 상승 영향으로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증가하며 광주·전남 신혼부부들의 대출 부담은 눈에 띄게 늘었지만, 소득은 해마다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지난해 지역 신혼부부들의 평균 소득은 광주 5523만원·전남 5112만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345만원(6.7%↑)·441만원(9.4%↑)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전국 평균 소득(6086만원)보다 광주는 500만원가량, 전남은 1000만원 가까이 모자란 금액이다.

광주·전남 신혼부부들은 새로운 출발을 하고 나서도 녹록지 않은 살림살이에 출산마저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신혼부부들의 평균 자녀 수는 광주 0.77명·전남 0.81명으로 한 명이 채 되지 않았다. 게다가 맞벌이를 하는 부부는 평균 출생아가 광주 0.72명·전남 0.75명으로, 외벌이(광주 0.72명·전남 0.87명)를 밑돌았다.

광주·전남 초혼 신혼부부의 절반 이상은 맞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비중은 지난해 역대 최대(광주 55.8%·전남 50.6%)를 나타냈다. 지난해 광주·전남 맞벌이 초혼 신혼부부 2만5309쌍의 40.9%(1만357쌍)의 자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의 절반 가량(광주 48.5%·전남 47.3%)은 집 없이 신혼을 보내고 있었다.

민원청 광주전남연구원 인구정책지원연구센터장(행정학 박사)은 “결혼부터 출생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주거 개선을 확대해야 한다”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전남 농산어촌 유희과 귀농 귀여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금리·고물가 시대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신규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활용해 전남 주거 환경을 개선하면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출생률을 높이는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다가오는 새해 2023 12일 저녁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빅도어(BIG DOOR)가 'HAPPY NEW YEAR 2023' 문구와 화려한 조명으로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조정래 작가, 루오를 만나다 ▶2면
- 메시·모드리치의 '라스트 댄스' ▶18면
- 굿모닝 여행 - 광주 한바퀴 '오매나 하우스' ▶22면

사랑과 감사의 68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행안부, 가뭄 특별교부세
광주 40억·전남 76억 지원

행정안전부가 극심한 가뭄을 겪는 광주에 40억원, 전남에 7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12일 국민의힘 전남도당에 따르면 행안부는 국민회의 전남도당과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극심한 가뭄으로 불편을 겪는 호남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에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처럼 특교세 지원을 결정했다. 행안부는 전북에도 특교세 37억원을 지원한다.

앞서 국민의힘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은 지난 달 23일 전남 안도 가뭄 현장을 방문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특교세 지원을 요청했고, 이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상민 장관께서 광주, 전남, 전북 특교세 지원 결정을 알려주셨다”며 “안도 광역상수도망 설치 등도 이뤄질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주52시간제·호봉제 손본다
尹정부 노동시장 개편 시동

전문가들로 이뤄진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12일 정부에 권고한 노동시장 개편 방안은 크게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으로 나뉜다.

주 52시간제를 업종이나 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 간 유지돼 온 노동시장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는 눈앞에 닥친 가장 시급한 노동 과제였던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된 만큼 그 기세를 몰아 연구회 권고문을 토대로 내년 본격적인 입법 과정에 나서는 등 노동 개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다만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노동계와 갈등을 빚은 데다 개혁을 완수하려면 야당이 다수인 국회 협조도 필요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7월 18일 출범한 연구회가 약 5개월간 논의 끝에 이날 내놓은 권고문 가운데 근로시간과 관련된 부분은 ‘자율과 선택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요약된다.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통해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누리도록 해 근로시간 총량을 줄이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구회는 이 같은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해 노사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어 온
전국 1,257개의 산업단지

기업의 성장을 위한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저탄소화**
찾고 머물고 싶은 **공간 인프라 확충**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안전·안심 일터 조성**
성장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지역 중심 개편**

산업단지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혁신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환시대,
다시 도약하는 산업단지

산업단지 디지털 혁신
산업단지 대전단 프로그램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

저탄소 산업단지 구현
저탄소 대표모델 산업단지 구축
친환경 탄소저감 산업단지

찾고 머물고 싶은 산업단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확대
산업단지 브랜드화도 산업관광 활성화

함께하는 안전·안심 산업단지
Safety Zone 운영
산업단지 내 중대사고 감축

기업과 지역이 주도하는 산업단지
산업단지 제도 전면 재검토
산업단지 외국인 인력 수용방안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